

한진칼 회장에 조원태

“현장 중심·소통 경영하겠다”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은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조원태 신임 대표이사 회장 선임은 고(故) 조양호 회장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그룹 경영을 지속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그룹 창업 정신인 ‘수송보국’을 계승·발전시키고, 한진그룹 비전 달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조 신임 회장은 “선대 회장들의 경영이념을 계승해 한진그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현장중심 경영, 소통 경영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신임 회장은 2003년 8월 한진그룹 IT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의 영업기획담당으로 입사했다.

2004년 10월 대한항공으로 자리를 옮겨 경영기획팀, 자재부, 여객사업본부, 경영전략본부, 화물사업본부 등 주요 분야를 거쳤다. 2017년 대한항공 사장에 취임한 이후 델타항공과의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 출범, 아시아·태평양항공사협회 사장단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었다.

박성수 기자

parkss@meconomynews.com

주택·토지 공시가 인상… 또 수조원 세금폭탄

서울 재산세 25% 급증… 전국 6300억
단독주택 3배 증가… 소유주들 반발 일듯
중부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도 덩달아

정부가 올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수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주택을 비롯해 공동주택, 토지에 이르기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때문이다. 주택·토지 소유주들의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의신청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인 평균 9.1% 오른 결과, 단독주택으로 거둬들일 재산세는 전년 대비 855억원(11.9%)이 증가한 80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17.8% 오른 서울의 재산세액은 지난해 2318억원에서 올해 2904억원으로 25.3%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2% 오른 대구의 재산세액은 10.9%(379억원) 증가한다. 이어 세종 9.3%(26억원), 광주광역시 8.7%(148억원), 제주 8.3%(155억원), 경기 7.1%(1681억원) 순으로 재산세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전국 9.42%, 서울은

13.87% 올렸다. 전국은 2008년(9.63%), 서울은 2007년(15.4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자체 17곳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총 6조 2278억원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보다 5413억원(9.5%) 늘어난 금액이다.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서울시는 지난해(1조6648억원)보다 17% 많은 1조9474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32%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12년만에 최대치인 14.17%나 오른다.

400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은 3배 이상 많은 1298만 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공동주택으로 인한 재산세 인상폭이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전문가는 “주택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도 복잡해 실행해 보기 전에는 세수 효과를 추산하기 힘들다”면서 “다만 재산세로만 1조원에 이르는 세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거둬들일 재산세는 전년 대비 855억원(11.9%)이 증가한 80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주택·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지는 등 ‘세금폭탄’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사진=청와대 제공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중부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구분해 과세대상의 공시가격(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의무가 있고, 토지의 경우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세대상의 공시가격 합산 금

액이 각각 5억원,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 이들 세목에 일정 비율만큼 과세되는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까지 고려하면 공시가격 인상은 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비용 또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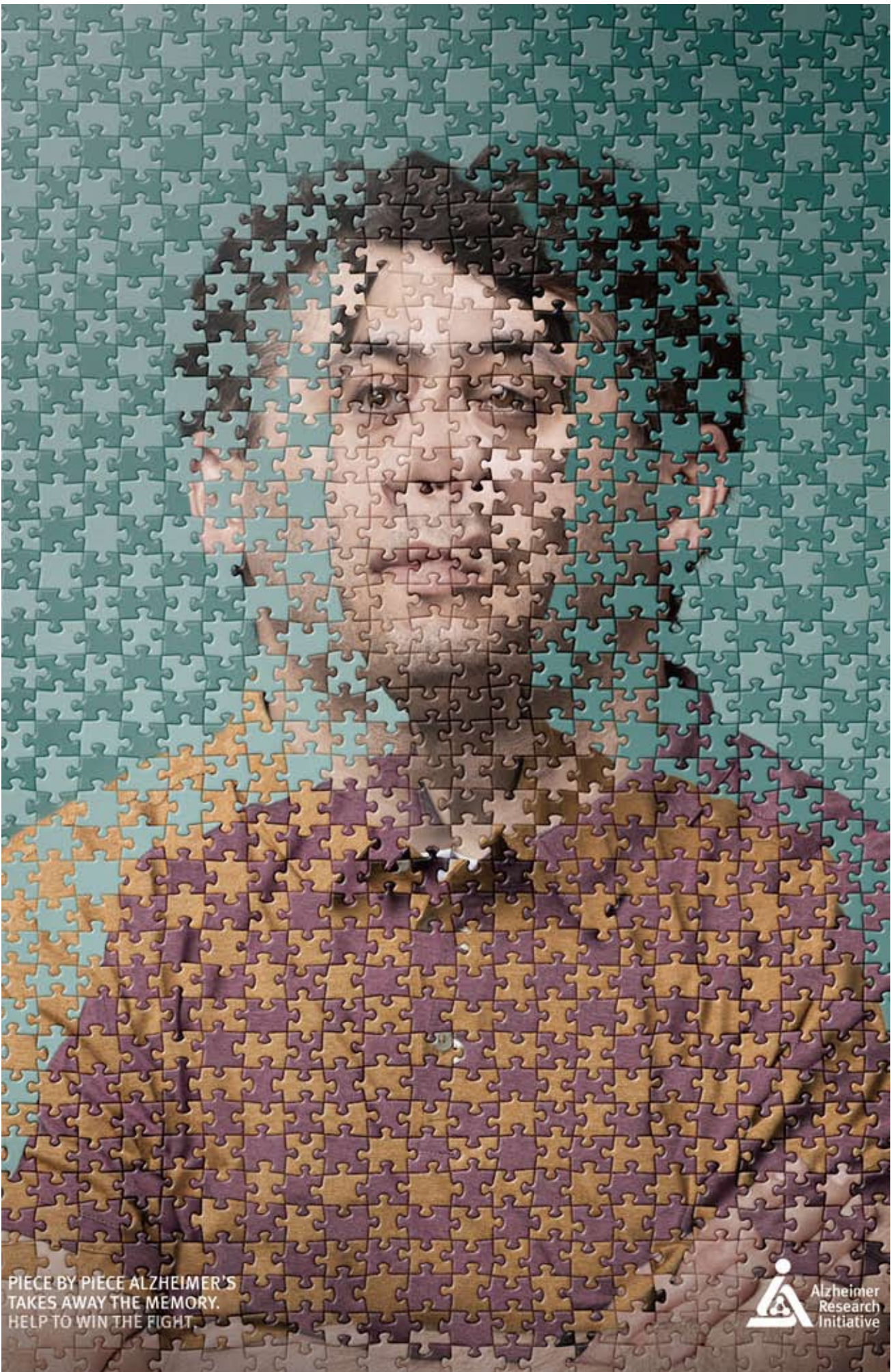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전체 세수효과는 구체적으로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

의 가격과 중부세 대상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증가분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주택가격과 유형이 다양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세수 증가분을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고가 주택의 경우엔 세 부담이 커지겠지만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학주 기자 haku@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4대강 ‘흰수마자’ 강이 도랑되니 생긴 것”

4대강 보 개방 후 물 빠지자
얕은 물에서만 사는 종 발견
환경부 자랑에 전문가들 일침

4대강 보 개방 후 금강 세종보(汝) 하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에 대해 정부와 환경전문가들 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보 개방에 따른 ‘자연성 회복’의 결과라고 홍보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주장은 강 생태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17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환경유전자를 활용한 담수어류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일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흰수마자 1마리를 처음 발견했다. 다음날인 5일에는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조사’를 수행한 장민호 공주대 교수 연구진이 이곳 일대에서 흰수마자 4마리를 추가 확인했다.

이번에 흰수마자가 발견된 지역은 세종보 하류 좌안 200~300m 지점이며, 보 개방 이후 드러난 모래 여울로 흰수마자의 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이 조성된 곳이다. 환경부는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잉어과 어류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라며 “그간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강의 모래층 노출지역이 사라지면서 개체수와 분포지역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금강 수계에서는 2000년대까지 금강 본류 대전에서 부여까지 흰수마자가 폭넓게 분포했으나 보 완공 시점인 2012



낙동강 보 개방 시 취수장 16개 신설로 4천257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달성보 인근의 농민들은 보 개방을 반대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지난 2월 달성보 완전 개방을 결정했다. 사진=시정경제DB

년 이후에는 본류에서 흰수마자의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장민호 교수는 “지난해 1월 이후 세종보와 공주보의 완전 개방(세종보 2018년 1월, 공주보 2018년 10월)으로 물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퇴적물이 씻겨 내려가고 강 바닥에 모래가 드러나면서 흰수마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금강 주변의 작은 냇가(지천)에 살고 있던 일부 개체가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주장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흰수마자는 수심이 얕은 모래 여울에 주로 서식하는데, 보 개방 후 발견됐다는 건 금강에 물이 빠지면서 ‘개천’이나 ‘도랑’으로 전락한 꼴이라는 것이다.

수질환경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는 한 언

론에 흰수마자 발견에 대한 환경부의 ‘자연성 회복’ 주장에 대해 “강 생태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흰수마자가 나타났다”고 좋아하고 있다”며 “이번에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은 금강이 ‘금천’ 또는 ‘금도랑’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흰수마자는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개천에 사는 어류라서 금강과 같이 큰 강에 서식하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본류에 수량이 늘자 흰수마자가 사라진 것이며 환경 당국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그 종의 원래 서식처를 찾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가 보 철거 또는 상시 개방을 위해 흰수마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식 기자 press@meconomynews.com

유명인들 마약 논란에 관세청 곤혹

최근 재벌총수 일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마약 복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 밀수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단속 부처인 관세청은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수법으로 밀수시도가 늘어 단속 실적 또한 증가세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관세청의 마약단속 건수는 660건, 426kg에 달했다. 중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6배 늘어난 수치다. 연간

단속 현황 역시 2014년 339건(71.6kg), 2015년 358건 (91.5kg), 2016년 423건 (50kg), 2017년 476건(69kg)에 이어 지난해에는 660건(426kg)이 적발돼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적발률이 높아진 부분에 자평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국내로 유입되는 양이 만만치 않아 밀수시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7년 7월 검사 출신의 김영문 관세청장 취임후 마약 밀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대구·수원지검에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를 지낸 이색 이력에서다. 하지만 마약류 단속건수 증가는 역으로 밀수 시도와 국내 유입이 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밀수 시도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